

국가직 9급 추가선발시험 총평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7년 국가직 하반기 추가채용 9급 행정학 시험은 난도가 높지 않은 평이한 시험이었습니다.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 거시조직이론, 델파이기법, 베버의 관료제, 하위정부모형, 피터스의 정부개혁 모형, 전통적 예산원칙, 바우처, 다면평가제도 등 대부분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하였으며, 기출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 난도가 있었다고 평가되는 논리모형은 문제속에 힌트가 제시되었고, 정보격차와 이해충돌 방지제도 문제는 이미 수업시간에 충분히 강조한 만큼 COMPASS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충분히 학습하고 준비했던 수험생이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평가됩니다.

여러분! 아직 지방직 12월 하반기 채용 시험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직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마지막까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봅시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출제유형분석

총론	4	재무행정론	2
정책론	4	정보화사회와 행정	1
조직론	3	행정환류	-
인사행정론	4	지방자치론	2

01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황론적 조직이론에 따르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최선의 조직구조나 관리방법은 없다.
- ②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시장의 자발적인 교환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의 조정비용보다 클 경우 거래를 내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③ 주인-대리인이론에 따르면,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와 주인의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 ④ 자원의존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환경에 피동적으로 순응하여야 한다.

- 해설** ① [○]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최선의 조직구조나 관리방법은 없다는 전제하에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조직설계 및 관리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한다.
- ② [○]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시장에서 교환에 따른 거래비용이 관료제적 조정비용보다 크면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 거래의 내부화(조직화)가 효과적이다.
- ③ [○] 주인 대리인 이론에 따른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격차와 상충적 이해관계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 ④ [×] 자원의존이론은 환경에 대한 임의론적 인식론에 입각한 전략적 선택이론으로 조직을 환경적 결정에 피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주도적·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는 것으로 본다.

〈거시조직이론의 분류〉

환경인식 분석수준	결정론 : 조직은 환경에 대한 종속변수	임의론 : 조직은 환경에 대한 독립변수
개별조직	체제구조적 관점 ① 구조적 상황론	전략적 선택관점 ① 전략적 선택이론 ② 자원의존이론
조직군	자연적 선택관점 ① 조직군생태학 이론 ② 조직경제학	집단적 행동관점 ① 공동체 생태학 이론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365~368

▶ ④

02 미래 예측을 위한 일반적 델파이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만들려는 시도이며,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뿐 아니라 정책대안의 개발·창출에도 사용된다.
- ② 전문가집단의 의사소통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 ③ 불확실한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을 활용하는 객관적 미래예측방법이다.
- ④ 전문가집단은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답변하며 자신의 답변을 수정할 수 있다.

해설 ③ [X] 델파이기법은 과거로부터의 경험적 자료나 이론이 없는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직관에 의존(통계자료 분석 X)하는 주관적(객관적 X)·질적 미래예측기법이다.

〈전통적 델파이기법의 특징〉

적용	일반문제(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예측
응답자	동일영역에 일반전문가
익명성	완전한 익명성(직접대면접촉의 상호토론 X), 익명으로 솔직한 의견 반영을 기대
통계	일반적인 통계처리
합의	합의 도출(의견일치를 유도)
토론	토론없음.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232, 233

▶ ③

03 베버(M. Weber)가 주장한 이념형(ideal type)으로서의 근대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료는 계급과 근무연한에 따라 정해진 금전적 보수를 받는다.
- ② 관료는 객관적·중립적 입장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한다.
- ③ 모든 직위의 권한과 관할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다.
- ④ 관료의 업무 수행은 문서에 의한다.

해설 ② [X] 근대적 관료제(Weber)는 임무수행의 비개인화(impersonalism)를 특징으로 한다. 관료들은 임무수행 시 개인적 이익이나 특별한 사정, 상대방의 지위 등에 구애되는 일 없이 객관적·중립적 공평무사함을 유지한다.

<근대적 관료제의 특징>

① 법규에 의한 지배, ② 계층제적 구조, ③ 비개인성, ④ 문서주의, ⑤ 전문화와 분업, ⑥ 관료의 전임화(금전적 보수지급 ⇨ 공직의 안정성과 업무능률 향상)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345

▶ ②

04 하위정부모형(subgovernment model)에서 정책영역별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3자 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의회의 위원회
- ② 관련 이익집단
- ③ 소관부처(관료조직)
- ④ 시민사회단체

해설 ④ [X] 하위정부 모형은 이익집단, 입법부의 상임위원회(의회의 위원회), 행정기관의 관료(소관부처, 관료조직) 등의 소수 엘리트들이 연대를 형성하여 특정 영역의 정책결정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3자 간 동맹을 말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204

▶ ④

05 정책평가의 방법을 논리모형(논리 매트릭스)과 목표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논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 프로그램이 특정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어떤 논리적 인과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 ② 프로그램이 해결하려는 정책문제 및 정책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정책형성과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의 오류와 정책집행의 실패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정책이 달성하려는 장기목표와 중단기목표들을 잘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모형이다.
- ④ 프로그램 논리의 분석 및 정리과정이 이해관계자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해설 ③ [X] 정책평가 방법을 논리모형(정책 프로그램 논리모형)과 목표모형으로 나누었을 때 목표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목표모형은 정책이 달성하려는 장기 목적과 중단기 목표들을 잘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모형이다.

<논리모형(Logic model)과 목표모형>

	논리모형 or 정책 프로그램 논리모형	목표모형 or 목적달성 평가모형
개념	정책 프로그램의 요소들과 정책 프로그램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투입 → 활동 → 산출 → 결과로 정리해 표현	정책이 달성하려는 장기 목적과 중단기 목표들을 잘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모형
특징	① 논리적 인과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어 정책집행 과정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음. ② 정책문제 및 정책의 결과물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타당성 제고(인과관계 오류와 집행 실패를 구분할 수 있게 함) ③ 이해관계자의 정책이해를 높이고 논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	① 목적 달성 여부를 선별적으로 보여줌. ② 명확성과 단순성이 주요 특징



06 피터스(B. Guy Peters)가 제시한 정부개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장모형(market model)에서는 조직의 통합을 통한 집권화를 처방한다.
- ② 참여정부모형(participatory model)에서는 조직 하층부 구성원이나 고객들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가 확대될수록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 ③ 신축적 정부모형(flexible government)에서는 정규직 공무원의 확대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 ④ 탈규제적 정부모형(deregulated government)에서는 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 해설**
- ① [X] 시장모형에서는 공공부문의 독점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구조적 분권과 내부관리에서 성과급 등 민간관리방안의 도입을 처방한다.
 - ② [O] 참여정부모형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 관료조직의 하급 구성원과 시민들의 참여가 최대한 보장될 때 공익이 확보된다고 가정한다.
 - ③ [X] 신축적 정부모형(유연조직 모형)은 정부조직의 영속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규직 축소 등 가변적 인사관리를 처방한다.
 - ④ [X] 탈규제적 정부모형은 내부규제 완화를 통해 공무원의 창의성과 활동주의를 지향하고, 공무원의 재량권의 확대를 처방하는 모형이다.

〈Peters의 정부개혁 모형〉

구 분	전통적 정부	시장적 정부	참여적 정부	신축적 정부	탈규제 정부
문제제기	전근대적 권위	독점	계층제	영속성	내부규제
구조개혁방안	계층제	분권화	평면조직	가상조직	특정 제안 없음
관리개혁방안	직업공무원제, 절차적 통제	성과급, 민간부문의 기법	총품질관리(TQM) 팀제	가변적 인사관리	관리재량권 확대
정책결정 개혁방안	정치·행정의 구분	내부시장, 시장적 유인	협 의 협 상	실험	기업가적 정부
공익의 기준	안정성, 평등	저비용	참 여 협 의	저비용 조 정	창의성, 활동주의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167



- 해설** ② [○] 주식백지신탁은 공직자윤리법상의 의무로 공직자윤리법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554, 555

▶ ②

14 우리나라의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원인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 ③ 다면평가의 결과는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④ 해당 공무원에게 평가정보를 다각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능력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 해설** ① [×] 다면평가제도는 다수의 평가자가 다양한 방향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상사, 동료, 부하, 고객(민원인)으로 구성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다면평가】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③, ④ [○] 다면평가의 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활용토록 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518, 519

▶ ①

15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도,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 포함)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해설** ① [○] 지방자치법 제14조

지방자치법 제14조 【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X] 동법 제16조

지방자치법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O] 동법 제16조

지방자치법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O] 지방제정법 제39조

지방제정법 제36조 【지방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704, 840, 842, 843



16 정보 격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보 격차를 ‘개인, 가정, 기업 및 지역들 간에 상이한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비롯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 이용에서의 차이’로 정의했다.
- ② ‘정보화마을’은 우리나라에서 도농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한 지역정보화정책의 사례이다.
- ③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정보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④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해설 ② [O] 정보화마을은 행정안전부가 2001년도부터 도·농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정보화 역점사업이다.

③ [X]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 X)에게 정보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O]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714, 715

▶ ③

17 바우처(voucher)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살라몬(L. M. Salamon)의 행정수단 유형분류에 있어서 민간위탁과 같이 직접성이 매우 높은 행정수단이다.
- ② 전자바우처의 도입을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③ 수혜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④ 저소득층 및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해설 ① [X] 살라몬(L. M. Salamon)의 행정수단 유형분류에 따르면 바우처(voucher)는 직접성이 낮은(높은 X) 행정수단에 해당한다.
 ② [O] 전자바우처의 도입을 통해 바우처(voucher)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③, ④ [O] 바우처(voucher)는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면서 시민들의 서비스 구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소비자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식품구매권, 노인, 장애인, 보육정책 등을 중심으로 활용된다.

<직접성 정도에 따른 살라몬의 분류>

직접제공	간접제공
정부소비, 공기업, 경제적 규제, 직접 대출 등	계약, 바우처, 대출보증, 보증금, 손해책임법 등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64

▶ ①

1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지면 재정분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
- ②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제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없는 재원이다.
- ③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에 속하고, 보조금은 의존재원에 속한다.
- ④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해설 ① [O] 의존재원은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해 결정·실현되는 재원으로 비중이 높아지면 재정분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
 ② [X]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 ④ [○]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재정법 제20조 【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809, 854, 866

▶ ②

19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괄한 국가 전체 재정을 의미한다.
- ②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출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 ③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이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② [×] 조세지출예산제이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세지출(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고 포기한 액수)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서 작성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주기적으로 공표하여 행정부에 일임된 조세지출을 입법부 차원에서 국회차원에서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618, 620, 623

▶ ②

20 예산의 원칙과 그 내용, 예외사항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전의결의 원칙 —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확정 — 준예산
- ② 통일성의 원칙 — 특정수입과 특정지출의 연계 금지 — 특별회계
- ③ 단일성의 원칙 — 세입과 세출 내역의 명시적 나열 — 이용과 전용
- ④ 완전성의 원칙 — 예산총계주의 — 전대차관

해설 ③ [×] 단일성의 원칙은 회계장부가 너무 많으면 재정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예산은 가능한 모든 재정활동을 포괄하는 단일의 예산 내에서 정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외는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 등이다.

④ [○] 완전성의 원칙(예산총계주의)은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외는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입, 현물출자, 전대차관 등이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595, 596

▶ ③